광주세계수영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 조선대로 바뀌나

FINA 광주 현장 점검…합의 끝난 경기장 일부 시설 돌연 변경 요구

수구 관람석 2000석 증설도…여수 방문 못해 오픈워터 실무 논의키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20여 개월 앞두고 국제수영연맹(FINA) 측이 돌연 일부 경기장 관중석 규모 증대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미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최근 FINA 측이 돌연 일부 시설의 변경을 요구해옴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과 건축가인 와킨 푸욜 시설위원장, FINA 오피셜 파트너인 '밀싸 풀'사의 트레버 티파니 임원 등이 지난 15일부터 3일간 광주를 찾아 주요 경기시설을 둘러봤다.

이들은 경기장 후보지인 남부대수영장(경영, 다이빙), 진월테니스장 임시풀(수구), 염주체육관(아티스틱수영), 광주시내(하이다이빙)를 차례로 돌아본 뒤 자문과 조언, 제안 등을 이어갔다.

특히 수구 종목의 경우 '유럽에서 인기 스포츠인데다 TV 시청자가 많은 점'을 들어 경기장 관람석을 기존에 협의한 3000석보다 2000석 많은 5000석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직전 대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 수구관람석이 5000석 이상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수구 경기장인 진월테니스장 임시풀의 경우, 물리적으로 2000석을 늘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기장 집적화 차원에서 차라리 남부대 운동장에 5000석 규모의 임시풀을 짓기로 잠정 합의했다. FINA와 광주시는 이를 위해 기술적 협의와 도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FINA는 또, 남부대 수영장에서는 다이빙만 하고, 경영의 경우 러시아 카잔대회에서처럼 널따란 축구경기장에서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검토됐지만, 현장 방문 결과 남부대 수영장이 다소 규모는 작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하이다이빙의 경우, 조선대 운동장과 월드컵 보조경기장 등 3곳이 후보지로 제시된 가운데 대학 본관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무등산이 바라다보이는 장점을 지닌 조선대 운동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종목인 아티스틱 수영이 열릴 예정인 염주실내체육관에 대해 FINA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오픈워터 예정지인 여수 방문도 검토됐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방문하지 못한 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무 논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FINA 측이 일부 경기장 변경과 관람석 증설을 요구함에 따라 자칫 총사업비가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회 총사업비는 1697억원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FINA 요구대로 임시 수구장을 설치하면 1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회 예비비(81억원)에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하이다이빙의 경우 조선대 본관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FINA측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7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선수권대회는 7월29일~8월11일 14일간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기장 바꿔 주세요" 지난 17일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들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의 주요 경기장 시설을 찾아 대회조직위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제공>

與 멀어지는 '한뿌리' 국민의당 예산·입법안 처리 난항 우려

安대표 우클릭 중도통합 노선 확고 "호남의원 포용 협조 구해야" 의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통합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야관계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우선, 여소야대 정국 돌파를 위해서는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 협력을 원하지만 안 대표의 입장이 오히려 양측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정책 지향점이나 정체성이 국민의당과 너무 멀어질 경우 20대 국회 내내 '소여'(小與)로서 '거야'(巨野)에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민의당이 안 대표의 중도통합론으로 인해 정책 기조에서 '우클릭'을 한다면 보수정당과 공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대로 국민의당과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후의 개혁 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당과 협의의 틀을 강화하면서 예산과 법안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2+2(당대표·원내대표) 협의체'를 포함한 입법연대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개별 사안마다 합당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관심을 보이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당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 측의 현재 입장으로 볼 때 국민의당 지도부는 여당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대표의 중도통합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만이라도 포용,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정계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 '몸집 불리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전히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며 독자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합으로 우리가 과반 의석인 151석을 채울 수 있다면 정계개편이 의미가 있겠지만 150석을 넘기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국회 개헌특위 뒤늦은 가동…여야 이견 험로 예고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가능할까

22일부터 매주 쟁점별 집중토론 자문위 혼합정부제 다수의견 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개헌특위는 다음달 6일까지 매주 2차례씩 모두 6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별로 집중토론을 할 예정이다.

일정별로 보면 22~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권력구조(정부 형태)를 논의한다.

지난 1월1일 활동을 시작한 개헌특위는 그간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겉돌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헌특위 1소위는 기본권, 2소위는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한다. 그러나 조문 작업과 주요 쟁점 합의를 도출하는 기초소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개헌특위의 계획이 이뤄질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이 이원화된 혼합정부제를 다수의견으로 한 헌법 개정 보고서를 지난 17일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개헌특위 자문위 제2소위원회 정부형태분과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은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꼽았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고, 내각책임제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혼합정부제는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하는 형태다.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행정부 내 분권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